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2006년 6월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최진욱*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대부분은 해외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다수는 정부규제 항목을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다른 경쟁국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정부규제가 OECD 국가들의 IMD 국가경쟁력 지표에 미친 영향과 범위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인당 GDP와 R&D 지출규모와 같은 전통적인 결정요인들과 더불어 종합적인 정부규제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적인 규제수준을 규제분야별, 규제정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 규제와 가격규제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다른 규제분야나 규제정책에 비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완화·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사용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핵심용어: 국가경쟁력, 규제정책, 규제개혁, IMD, OECD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E-mail: jinchoi@korea.ac.kr)

접수일: 5/1, 게재확정일: 6/2

I. 서론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경제와 지역경제가 상호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 국가는 무한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과거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방식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정부와 기업의 큰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경쟁상대인 미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국가·지역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Gardiner et al., 2004).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이나 삶의 질의 향상을 보여 주는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개별적인 요소는 국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시장의 물적 기반(Infrastructure), 기업과 시장의 효율성, 개인 노동의 양적·질적 수준 등 매우 다양하다. 그중 개인과 기업, 시장의 소비·생산·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 또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¹⁾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 가운데 정부에 의한 규제정책은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

1)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의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지나쳐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경우 오히려 정부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장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은 중요한 의제를 형성한다. 국가경쟁력, 특히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에 관련하여, 독일의 개혁프로그램인 “아젠더 2010”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Wolfgang Klement 전 경제노동부장관은 경쟁과정의 확대, 민영화, 관료주의의 철폐 등으로 인해 독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조선일보, 2006년 2월 9일자). 독일의 사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는 기업과 개인의 생산·소비활동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지며, 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²⁾

이런 까닭으로 스위스의 국가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이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과 같은 해외 평가기관은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과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고, IMD는 정부 규제정책을 정부의 효율성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IMD와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는 국가별 순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정부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와 신인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경쟁력 순위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Fagerberg, 1988; Lall, 2001).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조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경쟁력 조사와 평가에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지시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중앙일보, 2005년 9월 28일자). 비록 IMD와 WEF에 의한 순위 결과가 개별 산업, 기업, 정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시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시적·거시적인 맥락에서 다각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관들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는 많은 국가들의

2) 거버넌스 평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Kaufmann 외(2003)의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결정짓는 6가지 지표 중 규제의 질(Quality of Regulation)이 포함되어 있다.

경쟁력을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국가경쟁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주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안국신, 2005; 전영서·차주영, 2001).

우리나라에서 IMD와 WEF의 경쟁력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 매번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면 조사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순위가 상승할 경우는 경쟁국과의 순위 격차가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과 기업은 한국의 순위가 하락했을 때는 물론이고 순위가 상승한 경우에도 상승의 원인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의 기여로 돌리고 하락의 원인으로 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을 지목하고 있다. 정부부문에 관한 비판의 시각에 는 거의 예외 없이 지나친 정부규제와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논지를 담고 있다.³⁾ 이러한 시각은 실제 평가항목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없지만, 그때의 비교평가는 단순비교일 뿐이라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제한적이다. 즉 대부분의 평가는 정부규제 항목을 다른 항목과 비교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다른 경쟁국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반드시 부정적인가의 문제는 Krugman(1994)의 지적처럼 선형적인 논리에 의해 판단될 것이 아니라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만일 규제가 부정적이라면 과연 얼마만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OECD의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타 경제환경적인 요인을 통제했을 때, 국가의 규제의 정도와 규제정책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제III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모델을 세우고, 횡단면 회귀분석(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3) 2005년 WEF가 국가경쟁력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WEF의 수석경제학자인 Augusto Lopez-Claros는 한국의 국민소득에 비추어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이유를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2005년 9월 28일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IV장에서는 제V장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II. 국가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전통적 결정요인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of a Nation)의 중요성이 회자되는 것과는 달리 학자들 사이에서 “경쟁력”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안국신, 2005; Fagerberg, 1988; Gardiner et al., 2004; Lall, 2001; Porter and Ketels, 2003).⁴⁾ 경쟁력에 관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Porter(1990: 73)는 국가경쟁력을 “국가산업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고, Tyson(1992: 10)은 “국제 경쟁기준에 부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있다. OECD(1992: 237)는 “개방시장경제에서 국내실질소득을 유지·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국제경쟁의 도전요구에 부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IMD는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 WEF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McArthur and Sachs, 2002). 어떤 정의에 의하

4) Krugman(1994)은 국가경쟁력 개념이 갖는 효용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실증분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Krugman이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기제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둘째로 “zero-sum”의 성격을 갖는 시장의 경쟁과는 달리 국가경쟁력은 “non-zero-sum”의 특징을 보이며, 셋째로 경쟁력의 개념이 생산성(Productivity)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등치시키는 Krugman의 입장은 Porter의 견해와 일치한다. Porter(1990: 76)는 “국가의 수준에서 경쟁력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개념은 생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성은 국민 개인소득(National per Capita Income)과 삶의 질(National Standard of Living)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

건 국가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의해 국가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과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통한 혁신능력,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기업지배구조 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기도 한다(이승훈, 2005; Laursen and Meliciani, 2002; van Stel et al., 2004). 그러나 기업의 생산과 경영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기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자본과 노동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개별 기업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에 공급되기까지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와 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환경이 중요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간·산업간 기술 확산이 중요하다.

미시적인 기업의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의 규모와 그 요소들의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측정에서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세 가지 요인들(시장경쟁과 효율적인 노동 분업에 기초한 자원배분, 인적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축적, 기술진보)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McArthur and Sachs, 2002). 우선 자본의 역할에 대해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노동대비 자본(Capital-Labor Ratio)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본의 증가는 저축률의 상승과 연결되어 자본가치의 하락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비용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생산성, 즉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Nkurunziza and Bates, 2003: 3).

국가경쟁력에 자본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는 노동생산성인데, 노동생산성 향상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다른 생산투입 요소와 산출이 고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생산단위당 노동비용 증가는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려 경제성장과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Fagerberg, 1988).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의 산출이 증가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증가하게 된다. 만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다른 기업과 산업 분야에 확산된다면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산업 전체의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의 기술개발 능력은 국가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Schumpeter(1943: 84)는 새로운 상품, 새로운 공급원,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자본과 노동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체감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orter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남미의 낮은 소득수준과 생산성은 역사적으로 폐쇄적인 경제구조와 함께 기술개발·확산을 통한 국가혁신능력(National Innovative Capacity)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들 이외에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정부지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나친 정부지출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공공프로그램을 확장할 경우 정부의 지출규모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정부는 세금을 높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늘어난 세 부담만큼 민간부문은 소비와 저축을 줄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Barro, 1991).

2. 국가경쟁력과 규제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요인과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수단은 경제의 구조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를테면 정부의 세금정책과 노동정책은 시장의 자본축적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끼치고,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보호나 기술개발 및 투자유인 정책 등은 시장의 기술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규제정책이다. 규제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경우, 규제는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구조적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시장과 경제주체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즉 제대로 작동하는 규제는 시장 역동성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Koedijk and Kremers,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규제의 부정적 측면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지적한 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따르면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규제기관과 소수의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Stigler(1971)는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Peltzman(1976)은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 정치인들이나 규제기관을 통하여 규제를 만들거나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자원은 사회후생손실(Social Deadweight Loss)을 야기하고, 사회후생손실은 국가자원의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규제는 국가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과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정치적 과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그 자체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경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획이론을 주축으로 한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주장은 다양한 기업·산업·국제 수준의 실증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고, 그 핵심적인 주장은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강화되거나 규제정책의 결정·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조직의 질(Bureaucratic Quality)이 떨어질 경우 해당 산업과 국가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Johnson et al., 1998; van Stel et al., 2004).

경쟁력에 대한 규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Baumol과 Malkiel(1993)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 규제는 미국 증권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92개

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은행소유가 국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La Porta 외(2002)의 연구는 일인당 소득이 낮고, 금융시스템이 후진적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많고 비효율적이며,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적은 국가일수록 국가에 의한 은행소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순환적으로 정부의 은행소유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인당 국민소득과 생산성 향상이 저조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Koedijk과 Kremers(1996)의 연구는 노동과 상품시장의 규제가 심할수록 국가의 경제생산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이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측면을 연구한 Shleifer와 Vishny(1994)는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는 정치인들과 관료들로 하여금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75개국의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분석한 Djankov 외(2000)의 연구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얻는 효용을 밝히면서, 진입규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공식 경제(Unofficial Economies)가 커질 뿐만 아니라 공공재화나 사적 재화의 질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III.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모델과 변수

규제가 OECD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정한다.

$$\text{국가경쟁력}_{i,t} = \alpha + \beta_i X_{i,t-1} + \gamma_j Z_{j,t-1} + e.$$

국제경쟁력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가 국제 평가기관이 측정한 지수를 자주 인용하는 만큼(안국신, 2005; 전영서·차주영, 2001), 본 논문도 IMD에 의한 OECD 국가들의 2004년 국제경쟁력 지수(World Competitiveness Index, WCI)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60개국을 상대로 측정한 평가항목 결과를 종합한 점수와 그 점수에

다른 순위를 발표하였다.⁵⁾ 이 중, 순위(Ranking) 자료는 서열척도의 성격상 개별변수의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등간척도인 개별 국가의 국가경쟁력 점수(Scores)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 “국가경쟁력 i, t ”는 t 시점에서 OECD 회원국 i 의 IMD 국가경쟁력 점수를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X_{i,t-1}$ 은 $t-1$ 시점에서 국가 i 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와 관련된 벡터를 의미하고, $Z_{i,t-1}$ 은 $t-1$ 시점에서 국가 i 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규제를 제외한 변수를 포괄하는 벡터를 의미한다. 특정 시점의 국가경쟁력은 그 이전 시점의 규제와 여타의 경제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2004년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2003년 자료를 사용한다. 벡터 X 와 Z 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포함되는 구체적인 변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X 를 OECD 국가의 종합적인 규제 수준을 이용하여 기본모델로 삼는다. 그러나 X 를 종합적인 규제수준으로 놓고 국가경쟁력을 분석할 경우, 다양한 규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종류의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종합 규제수준을 먼저 분석한 후, 기본모델을 확대한 1차 확장모델에서는 X 를 규제분야별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기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1차 확장모델 역시 규제분야별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실제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확장모델에서는 각 분야의 개별적인 규제정책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5) 1979년 처음 측정된 IMD의 국제경쟁력 지수는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Macroeconomy), 공공부문(Public sector), 기업부문(Business)과 인프라(Infrastructure)의 4분야를 각각 25%씩 가중치를 주어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 6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측정에서는 323개의 세부항목을 조사하였고, 이 중 WCI 산출에는 241개의 항목(통계자료에 기반한 129개 항목과 IMD 조사에 의한 112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IMD는 측정 결과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2004년의 경우 미국)의 점수를 100으로 하여 다른 국가들의 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반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와 기업경영경쟁력 지수(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로 구분하여 각각 3개 분야와 2개 분야로 세분하여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 전자는 거시경제환경, 공공기관, 기술력을 포함하고, 후자는 기업경영전략 정교화와 국내기업 경영환경의 질이 포함된다. 이 두 기관에서 측정하는 경쟁력 지수들은 모두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효율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IMD와 WEF의 지수를 포함한 규제개혁 지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김태윤·양준석(2005), 안국신(2005), 이현재(2005), Lall(2001) 참조.

벡터 Z 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기존의 이론에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 몇 가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우선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자본과 노동의 영향은 소득과 노동생산성을 통해 추정한다. 이를 위해 일인당 GDP(GDP per Capita)와 노동투입당 노동산출 비율을 대리지표로 사용한다. 전자 변수는 노동대비 자본의 비율을 반영하고(Barro, 1991), 후자의 변수는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다(Gardiner et al., 2004). 정태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두 가지 변수가 크다는 것은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와 노동생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기술개발 정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대리지표로 사용한다.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연구인력 공급 및 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유인정책과 더불어 국가의 혁신능력(National Innovative Capacity)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Porter et al., 2000: 3). 따라서 이 변수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출의 규모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를 독립 변수에 포함시킨다(Barro, 1991). 정부지출의 규모는 민간부문 생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변수는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기본모델, 1차 확장모델 그리고 2차 확장모델은 다음과 같고, 이 모델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출처 및 기술통계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기본모델:

$$\text{국가경쟁력 } i, 2004 = \alpha + \beta_1 \text{정부규제수준 } i, 2003 + \gamma_1 \text{일인당GDP } i, 2003 + \gamma_2 \text{노동생산성 } i, 2003 + \gamma_3 \text{정부지출 } i, 2003 + \gamma_4 R D i, 2003 + e.$$

1차 확장모델:

$$\text{국가경쟁력 } i, 2004 = \alpha + \beta_1 \text{자본시장규제 } i, 2003 + \beta_2 \text{노동시장규제 } i, 2003 + \beta_3 \text{기업활동규제 } i, 2003 + \gamma_1 \text{일인당GDP } i, 2003 + \gamma_2 \text{노동생산성 } i, 2003 + \gamma_3 \text{정부지출 } i, 2003 + \gamma_4 R D i, 2003 + e.$$

2차 확장모델:

$$\text{국가경쟁력 } i, 2004 = \alpha + \beta_1 \text{국내은행경쟁 } i, 2003 + \beta_2 \text{고용해고규제 } i, 2003 + \beta_3 \text{가격규제 } i, 2003 + \beta_4 \text{관료대응시간 } i, 2003 + \beta_5 \text{신규사업규제 } i, 2003 + \gamma_1 \text{일인당GDP } i, 2003 + \gamma_2 \text{노동생산성 } i, 2003 + \gamma_3 \text{정부지출 } i, 2003 + \gamma_4 R D i, 2003 + e.$$

〈표 1〉 변수의 정의, 출처 및 기술통계

변수	측정년도 및 정의	자료출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N
종속변수							
국제경쟁력 지수	2004년, 경제운영성, 정부행정효율, 발전인프라, 기업경영효율의 가중 평균(0~100점)	IMD, <i>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i>	100.00	41.95	70.20	14.67	30
독립변수							
ln(일인당 GDP)	2003년, ln(일인당 GDP) (US\$)	OECD, <i>OECD Factbook 2006</i>	10.90	8.85	10.09	0.44	30
노동생산성(%)	2003년, $(\frac{\text{노동산출}}{\text{노동투입}}) \times 100$		5.60	-1.10	1.79	1.55	30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2003년, $(\frac{\text{정부총지출}}{\text{GDP}}) \times 100$	OECD, <i>OECD in Figures 2005</i>	58.30	27.50	45.14	7.38	30
GDP 대비 R&D 지출(%)	2003년, $(\frac{\text{정부 및 산업 R\&D 총지출}}{\text{GDP}}) \times 100$		3.98	0.39	1.81	0.94	30
정부규제 수준 ^a	2003년,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업규제에 대한 평균 (0~10점)	Gwartney and Lawson, <i>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Annual Report</i>	7.90	5.10	6.44	0.79	30
자본시장규제 수준 ^a	2003년, 민간은행의 예금수탁 비율, 국내은행의 경쟁 등의 항목 평균(0~10점)		9.70	6.20	8.41	0.80	30
노동시장규제 수준 ^a	2003년, 최저임금제, 고용·해고에 대한 규제 등의 항목 평균(0~10점)		7.00	2.80	4.99	1.15	30
기업규제 수준 ^a	2003년, 가격통제, 신규 사업에 대한 행정통제, 관료대응시간, 신규 사업 용이성, 번척비용의 수준 항목 평균(0~10점)		7.90	3.50	5.93	1.07	30
국내은행 경쟁 수준 ^a	2003년,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허용 및 국내은행 지분 소유 허용 정도(0~10점)		10.00	5.30	7.57	1.28	30
고용 및 해고 규제 수준 ^a	2003년, 기업의 근로자 고용·해고 시 사적 계약에 의한 결정 정도(0~10점)		8.00	2.00	4.33	1.70	30
가격규제 수준 ^a	2003년, 농산물, 공산물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한 가격통제의 정도(0~10점)		10.00	1.00	5.90	1.93	30
기업활동 시 관료대응 시간 수준 ^a	2003년, 기업 관리자들이 정부 관료를 상대할 때 소요되는 시간(0~10점)		8.30	4.50	6.41	0.82	30
신규 사업 용이성 ^a	2003년, 신규 사업 시작 용이성(0~10점)		8.30	3.20	5.80	1.47	30

주: a 해당 분야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0의 값을, 규제가 적을수록 10의 값을 가짐.

2. 분석결과

OECD 국가에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인당 GDP(GDP per Capita)와 R&D 지출의 규모는 국가경쟁력 지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GDP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규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 중 가장 크다. 하지만 이 변수가 자연로그(Natural Log) 형태로 계산된 점을 감안한다면 일인당 GDP 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 적합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을 예로 든다면, 2003년 한국의 $\ln(\text{일인당 GDP})$ 은 9.87(US\$ 19,279)이었고, 2004년 한국의 IMD 경쟁력 점수는 62.20점(35위)이었다. 만일 다른 변수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ln(\text{일인당 GDP})$ 이 0.5 상승하여 10.37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덴마크의 $\ln(\text{일인당 GDP})$ 인 10.34에 근접하여 국가경쟁력 점수 84.38점(7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ln(\text{일인당 GDP})$ 이 0.5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GDP가 US\$ 12,000 이상 증가해야 가능하다.

둘째, R&D 지출규모는 GDP 대비 그 규모가 1% 증가할 때 국가경쟁력 지수는 모델에 따라 2.73점에서 3.71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R&D 규모가 GDP 대비 1% 상승할 때,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기본모델을 적용할 경우 62.20점에서 65.91점으로 높아져 스페인의 경쟁력 점수(67.41점, 31위)에 다소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R&D 지출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92.2억 달러의 추가적인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인당 GDP 변수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경쟁력 향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생산성의 회귀계수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사용된 3가지 모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회귀계수는 모든 모델에서 음의 값을 가져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rro(1991)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지만, 2차 확장모델을 제외하고는 통계

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2차 확장 모델은 GDP 대비 정부지출이 1% 증가할 때, 국가경쟁력 지수는 0.32점 감소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OECD 국가경쟁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2004년 IMD 국가경쟁력 점수)

변수	기본모델		1차 확장모델		2차 확장모델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상수	-159.08***	45.61	-145.11***	48.02	-147.38***	46.19
ln(일인당 GDP)	16.96***	4.64	14.69***	4.97	21.53***	4.52
노동생산성(%)	0.59	0.70	0.73	0.71	0.83	0.73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0.09	0.15	-0.22	0.18	-0.32*	0.18
GDP 대비 R&D 지출(%)	3.71**	1.34	3.53**	1.53	2.73*	1.42
정부규제 수준	8.36***	1.62				
자본시장규제 수준			5.51**	2.54		
노동시장규제 수준			1.38	1.12		
기업규제 수준			2.65	2.08		
국내은행 경쟁 수준					-1.16	0.99
고용 및 해고 규제 수준					0.76	0.73
가격규제 수준					2.29**	0.85
기업활동시 관료대응 시간 수준					-1.97	1.51
신규 사업 용이성					2.15*	1.12
N	30		30		30	
Adj. R ²	0.81		0.81		0.82	

주: ***, **, *는 각각 0.01, 0.5, 0.1의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규제와 관련된 변수들이 국가경쟁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국가의 규제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된 정부규제 수준 변수를

사용한 기본모델에서 이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인 유의미하며,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당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고 정부 규제 수준이 1단위 올라갈 때, 즉 전체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약화될 경우, 국가경쟁력 지수는 8.36점 상승하게 된다. 만일 한국의 종합적인 규제수준이 1단위 향상될 경우 IMD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62.20점에서 70.56점으로 향상되어, 벨기에(70.32점, 25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의 해석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Fraser Institute는 시장경쟁을 제약하거나 시장에서 자발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적 자유를 약화시키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정책을 고려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분야를 세 가지(자본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일반 기업 규제)로 구분하고, 다시 각 분야를 5개의 구체적인 규제·개입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총 15개의 하위항목 지표를 합한 값을 평균하여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을 계산하였다.⁶⁾ 따라서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의 1단위 상승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기본모델의 종합 규제수준을 자본시장, 노동시장, 일반 기업 등의 분야별 규제로 나누어 살펴본 1차 확장모델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OECD 국가경쟁력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과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규제와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 요인이 도입되어 자본시장 규제 수준이 1단위 올라갈 때 국가경쟁력은 5.51점 상승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 의한 자본시장의 개입정도가 줄어들어 자본시장규제 변수 값이 1단위 높아지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프랑스(67.67점, 30위)를 약간 상회하게 된다. 분야별 규제수준을 측정한 이 변수들의 산술평균이 이전의

6) Fraser Institute는 15개 하위항목에 0에서 10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규제분야별 지표는 해당 하위항목 5개의 단순평균을 통해 계산하였고, 이를 종합하는 정부규제 수준 지표는 세 규제분야 지표의 단순평균을 통해 산출되었다. 세부항목별 혹은 규제분야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평균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Gwartney와 Lawson(2005: 28)은 가중치를 부여한 여러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각 국가의 점수나 순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오히려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단순평균 계산은 모든 하위항목과 분야별 규제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Gwartney와 Lawson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종합 규제수준”을 구성하지만, 이 세 분야 역시 5개의 하위항목의 단순평균을 통해 계산되는 만큼 이 변수의 1단위 상승도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자본시장 규제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항목 중 “민간은행의 소유 지분 비율(총 국내예금 중 민간은행에 의한 예금수탁률)”의 점수가 5점 올라갈 경우(예컨대 민간은행의 예금수탁 비율이 75%에서 95%로 높아질 경우), 그 국가의 자본시장 규제 수준은 1단위 높아지게 된다.

셋째, 2차 확장모델은 구체적인 규제정책을 고려하였다. 1차 확장모델의 자본시장 규제는 국내은행의 경쟁 정도로 대신하였고, 노동시장 규제는 고용 및 해고의 신속성으로 대신하였다. 기업규제는 ① 가격규제의 정도, ② 기업의 관리자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을 대응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③ 기업이 신규로 사업을 할 경우 얼마나 용이한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규제분야별 포괄적 지표를 사용한 1차 확장모델과는 달리 구체적인 규제정책을 포함시킬 경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게 된다. 2차 확장모델의 분석 결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정책은 기업규제 변수 중 가격규제와 신규 사업 용이성으로 파악되었다. 1980~1994년까지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규제수준을 분석한 Koedijk과 Kremers(1996)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업 설립의 자유의 제한, 경쟁 및 기업합병 통제, 영업시간 규제를 통합한 상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s)가 심한 국가일수록 경제성과와 국가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차 확장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규제의 수준과 신규 사업의 용이성 변수가 1단위 높아질 경우, 즉 이 부분에서 정부개입 정도가 낮아질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경쟁력은 각각 2.29점과 2.15점 향상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Fraser Institute는 2003년 한국의 가격규제 점수를 1점 부여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⁷⁾ 따라서 만일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가격규제 정책이 일부 완화되어 에너지와 농산품 그

7) 가격규제 점수는 가격통제가 없을 경우 10점이 부여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자연독점 산업에 제한적으로 가격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8점을, 자연독점 산업이외 농업분야 등 예외적 산업에 대한 가격통제가 있을 경우는 6점, 에너지, 농업 그리고 가계에서 소비하는 주요상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4점,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있을 경우 2점, 그리고 다수의 경제 영역에서 가격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0점이 부여된다.

리고 주요 가계 소비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3점이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62.20 점에서 69.07점으로 높아져, OEC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벨기에(70.32점)와 프랑스(67.67)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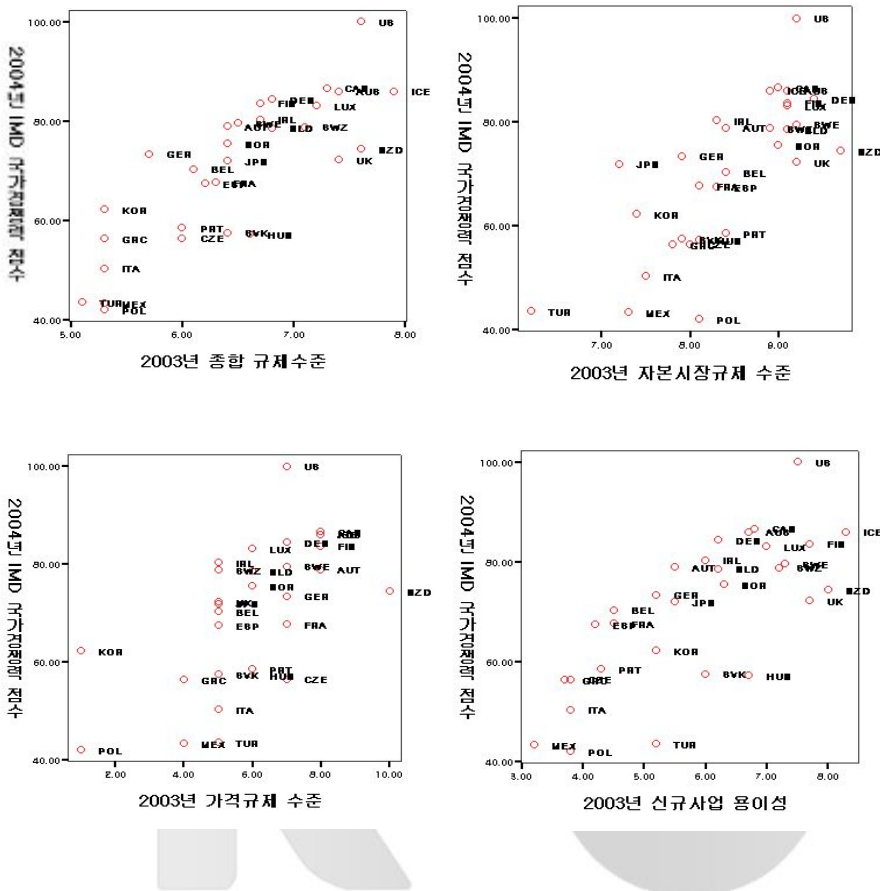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이 같은 분석결과는 OECD 회원국들에게 규제개혁의 상대적 중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비록 최근에 OECD 국가들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특히 시장에 대한 제약을 많이 하였던 국가들이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국가간 규제수준이 수렴(Convergence)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지만(Conway et al, 2005),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에 아직도 규제의 간극(Regulatory Gap)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⁸⁾ 규제에 대한 Fraser Institute의 측정결과를 볼 때 한국의 경우도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5.30점), 자본시장규제 수준(7.40점), 가격규제 수준(1.00점), 신규 사업의 용이성(5.20점)에서 모두 OECD 국가들의 평균(각각 6.44점, 8.41점, 5.90점, 5.80점)에 밀리고 있어, 아직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인당 GDP나 국가의 R&D 투자와 같은 전통적인 요인의 상승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재원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시스템을 잘 정비하여 활용한다면 그 성과를 얻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⁹⁾ 또한 정부가 시장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축소하여 남은 인력과 예산을 다른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면 규제 이외의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8) <그림 1>의 OECD 국가의 국가경쟁력 점수와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 자본시장규제 수준, 가격규제 수준 그리고 신규 사업의 용이성과의 상관관계지수(Correlation Coefficients)는 각각 0.82, 0.76, 0.61, 0.74이며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9)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관해서는 이주선(2006) 참조.

〈그림 1〉 OECD 국가의 IMD 국가경쟁력 점수와 규제 수준



IV.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이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정부의 규제가 OECD 국가들의 경쟁력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일정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들이 모여 있는 OECD 회원국들간에도 국가경쟁력의 편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다.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이 1위로 평가되어 경쟁력 점수로 100점을 받은 반면, 폴란드는 41.95점으로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7위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순위에 놓여 있다. 한국은 62.20점으로 전체에서 35위, OECD 국가에서는 21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신인도나 해외자본 유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비(非) OECD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OECD 회원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의 관심사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전통적인 변수들과 최근 들어 주목을 끌기 시작한 정부규제 변수들을 고려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인당 GDP, R&D 지출규모와 더불어 정부규제의 수준이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규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완화·폐지하고, 친시장적(Market-Friendly)인 정책을 사용할 때 국가경쟁력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제분야 가운데 자본시장 분야에 대한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개별 규제의 수준에서는 정부의 가격에 대한 규제와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규제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이 낮은 OECD 국가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규제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문제를 풀어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예컨대 정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규제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규제정책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념과 규제정책이 결정·집행되는 과정까지 감안한다면 규제개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도 비록 규제완화와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지만, 규제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김태운·양준석, 2005; 이주선, 2006).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향상되었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국가에 의한 지나친 시장개입에 있다는 점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가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개혁을 시도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 자료, 2005. 12. 5.
- 김태윤·양준석,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규제연구』 14(2), 2005.
- 안국신,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 문제점과 대안」, 『경제학연구』 53(4), 2005.
- 이승훈, 「기업경쟁력 강화-무엇이 문제인가?」, 『경제학연구』 53(1), 2005.
- 이주선,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중간평가」, 2006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6.
- 이현재, 「패널자료에 의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IMD 및 WEF지수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19(3), 2005.
- 전영서·차주영,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 및 국가경쟁력과의 상관관계」, 『생산조직 연구』 9(3), 2001.
- 조선일보, 2006년 2월 9일자.
- 중앙일보, 2005년 9월 28일자.
- Barro, Robert,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1991.
- Baumol, William J., and Burton G. Malkiel, "Redundant Regulation of Foreign Security Trading and U.S. Competitiveness,"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5(4), 1993.
- Conway, Paul, Véronique Janod, and Giuseppe Nicolette, "Product Market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1998 to 2003,"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419, 2005.
- Djankov, S., R. La Porta,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The Regulation of Entry,"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1904, 2000.
- Fagerberg, J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conomic Journal* 98(391), 1988.
- Gardiner, Ben, Ron Martin and Peter Tyler, "Competition, Productivity and Economic

- Growth across the European Regions,” paper presented at Regional Productivity Forum Seminar,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London, U.K., January 2004.
- Gwartney, James, and Robert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Annual Report*, Vancouver: Fraser Institute, 2005.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Lausanne: IMD, 2004.
- Johnson, Simon, Daniel Kaufman, and Pablo Zoido-Lobaton, “Regulatory Discretion and the Unofficial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88(2), 1998.
- Kaufmann, Daniel, Aart Kraay, and Massimo Mastruzzi, *Governance Matters III: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2*, Washington, D.C.: World Bank, 2003.
- Koedijk, Kees, and Jeroen Kremers, “Market Opening, Regulation and Growth in Europe,” *Economic Policy* 11(23), 1996.
- Krugman, Paul,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73(2), 1994.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chleifer,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Journal of Finance* 57(1), 2002.
- Lall, Sanjaya, “Compa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Performance: An Economic Analysis of World Economic Forum’s Competitiveness Index,” QEH Working Paper No.61, January 2001.
- Laursen Keld, and Valentina Meliciani,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vis-a-vis National Technological Spillovers for Market Share Dynamic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4), 2002.
- McArthur, J. W., and Jeffrey Sachs, “The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Measuring Technical Advancement and the Stages of Development” in Michael E. Porter, Jeffrey Sachs, P. K. Cornelius, J. W. McArthur, and K. Schwab (ed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Nkurunziza, Janvier D., and Robert H. Bates,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Working Paper No.98, Harvard University, March 2003.
- OECD, *OECD Factbook 2006*, Paris: OECD, 2006.

OECD, *OECD in Figures 2005*, Paris: OECD, 2005.

OECD, *Technology and the Economy: The Key Relationships*, Paris: OECD, 1992.

Peltzman, Sam, "Towards a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1976.

Porter, M. E., and C. H. M. Ketels, *UK Competitiveness: Moving to the Next Stage*, DTI Economics Paper 3, London: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3.

Porter, Michael E.,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68, 1990.

Porter, Michael E., Jeffrey L. Furman, and Scott Stern, "The Drivers of National Innovative Capacity: Implications for Spain and Latin America," mimeo, May 2000.

Sch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Unwin University Books, 1943.

Shleifer, A., and R. Vishny, "Politicians and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994.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 1971.

Tyson, Laura D'Andrea,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van Stel, André, Martin Carree, and Roy Thurik,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National Economic Growth: An Analysis of Using the GEM Database," CALES-paper N200320, February 2004.

Effects of Regulation on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n OECD Countries

Jin-Wook Choi

An assess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s in most cas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suc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the IDM and the WEF. Yet this assessment does not accurately indicate the causality between regulation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ecause it simply compares a regulation index with other survey indices within a country or between countries. Utilizing a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this article aims at identifying the impacts of regula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Results sh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d by the IMD's WCI is affected by a composite index of regulation together with GDP per capita and R&D investment. Further analyses that decompose the regulation index into specific regulatory areas and policies show that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 price controls, and restrictions on starting a new busines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se results imply that reforming anti-competition policies and utilizing more market-friendly policies are critical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Key words: National Competitiveness,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IMD, OECD